

금융: 외환 위기와 금융 산업 개편

임진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환 위기의 현황과 파장

1) 외화 유동성 부족과 신용 마비 현상

1997년중에 대기업 연쇄 부도로 시작된 금융 위기 여파가 기업의 추가적인 도산을 유발시키고, 다시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누증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화 부도 위기와 BIS 규제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도산·합병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일단 외화 부도 사태로 인한 총체적인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의 완전 해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역 금융의 마비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자유변동환율제 하에 환율 변동의 안전핀으로서 외환 보유고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외 투기 자금의 공략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여전하다.

한편, 이러한 외환 위기의 여진이 국내

신용 마비 현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BIS 기준에 의한 은행의 건전성 평가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출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에 대한 경영 시정이나 인수·합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부실 종금사의 폐쇄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금융·재정 정책 기조는 초긴축 방향으로 잡혀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내수의 (-)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기업 부도가 계속될 것임에 따라 부실 채권의 누증과 금융 기관의 도산 도미노 가능성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실물과 금융 부문 상호간의 '부도와 자금 경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적어도 1998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나아가 이러한 금융 부문의 불안은 신용도에 따른 자금과 채권 시장의 양극화, 금융 기관 여신의 조기 회수 행태 지속 등을 통해 자금난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

된 상태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고 차입 조건도 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영 환경의 전망

1998년 경제 여건은 금융 기관의 도산·합병, 기업 부도 급증, 소비 위축, 실업자 급증에 따른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요약된다. 현재의 금융 경색을 어떻게 무리 없이 종결짓는가에 따라서 수출 부문의 빠른 성장세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극심한 내수 부진에 이어 금융 경색으로 원자재 수입난, 수출 금융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수출 증가율도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수의 극심한 침체와 함께 수출 신장의 한계로 1998년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1998년 1/4분기중 에너지 수입이 집중되는 만큼 수출 증대의 필요성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 그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

한편, 자금 경색 여부와는 별개로 IMF 협상 조건에 따른 고금리의 유지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 여건과 구조 조정의 압력 증가

1) IMF지침에 의한 경제 운용 방향

가속화되는 금융 개혁에 의해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의 확대, 연내 단기채, 국공채, 기업 어음 시장 추가 개방, 외국인 은행 지분 한도 51%로 확대, 대기업 상호간 지급 보증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거시경제 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경제 각 부문의 수지 적자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400~1,600 원대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변동 폭이나 최고치는 상한선이 없는 실정이다. 시중 금리는 M3 증가율을 8%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화 긴축 정책과 함께 18% 이상에서 형성될 예정이다. 물가는 환율의 상승과 부가가치세의 인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으며, 이에 대해 총수요 위축을 통해 상쇄시키고자 하는 정책 운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구조 조정의 압력 증가 예상

불황기를 맞이하여 국내 금융 기관들은 자발적인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을 업계

내에서 먼저 시행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IMF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금융 산업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BIS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實査와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시정 명령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경영 여건은 경기 불황 속에서 빠른 속도의 산업 구조 조정과 경영 구조 변화가 동반하는 격변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 은행·증권·보험권의 모든 금융 기관들이 스스로 체질 전환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에 의해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의 인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가와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금융 기관 인수에 있어 好機일 것이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적인 인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 1~2년 사이에 국내 금융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금융 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해외 금융 기관이 보유한 선진 금융 기법과 고객 만족 영업 전략, 철저한 능력급인사제도 등이 국내 금융 기관들에

접목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내 금융 기관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구적인 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 금융 산업 개편의 방향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 산업 구조 조정의 성격은 금융 기관들의 도산·합병의 고통을 수반한 구조 개편일 것이며, 개편 방향은 크게 개방화와 겸업화, 그리고 진입·퇴출의 자유화라 할 것이다. 향후 국내 금융 산업의 업종별 참여 업체 수가 일단 감소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업태의 다양화와 함께 업체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개별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형화와 전문화도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한편, 기업들도 간접 금융을 통한 차입보다 주식 시장을 통한 증자와 채권 발행 등의 직접 금융에 의한 조달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IMF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 개선과 공시 의무 충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도 진행될 것이다. 향후 국내 증권 시장의 빅뱅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증권 시장의 정보 유통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특히, 기업 M&A가 크게 활성화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가 증권 시장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구조로 촉진되어, 기업의 경영 틀이 주주 중시의 경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사업 투자에 있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실행하는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자금 동원을 자제하고 조달 방법과 수단에도 전문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 수요 행태가 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은 수요자 중심의 구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신정부의 정책 과제

1)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성 회복 노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총체적 신용 부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997년말 다소 미흡하나마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금융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

한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정부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이 기대될 수 있으며, 금융권도 경영의 어려움이 쉽게 가지지 않을 것이나 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 신뢰성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금융 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바로 고객들의 신뢰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보완 과제

우선, 내수 시장의 극심한 불황 극복의 방안으로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시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개혁의 핵심 난제인 금융 관행의 시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케줄 하에 규제 완화 시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자본 시장의 대외 개방에 걸맞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에 관한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본 자유화는 대외 투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해외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는 지나친 자금 유입과 뒤따를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운용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 저리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키워온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금융 산업이 국내 경기 불황과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자율적인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여건 조성이 불가피하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예에서처럼,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있다. 반면, 개별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하여 M&A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즉, 금융 긴축 기조가 상당히 강력해짐에 따라 금융 기관들은 경쟁 열위 부문을 정리 매각하고 업무 영역을 넓혀 수익원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간 정리 부문의 상호 교환이나 합병 등을 통해 경영의 건실화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는 이러한 금융 기관들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한 투기 행각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방과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나,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영업 여건에서 수익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증식의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기금 조성, 채권 유동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중소기업에 걸쳐 현재 직면해 있는 시장 가격의 조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질적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고비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열위 문제가 크게 후퇴한 상황이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채산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효율 구조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기관들이 기업의 질적 고도화 작업에 촉진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투자 금융이나 벤처 금융, 그리고 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한 영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금융 자율화의 재정비

작금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자본 시장 개방의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대외 개방 정도와 국내 금융 자율화의 정도가 역전되어 버린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업의 진출 규제 완화라 할 것이다. 해외 금융 기관이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는 철저한 상업성에 입각한 기업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국내인에 의한 은행업 영위는 여전히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적 기관의 성격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경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은행의 자율적경영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혁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씨티은행의 경우 경영 능력

이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정책 금융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보다 유리한 경쟁 여건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그 영향이 적지 않다. 국내 시장의 대외 개방 속도만큼 무차별적인 경쟁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최근의 종금사 몰락은 주 원인을 제도적 왜곡에서 찾아야 한다. 즉, 겸업화의 이점이 거의 사라져 가는 시점에 여전히 종금사의 지점 수나 증자의 역제가 유지됨으로써 해외 자금 조달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도록 묶어 두게 되었다. 해외 금융 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저리의 자금력으로 영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국내 금융 기관들이 품질 면에서 외국 업체에 크게 뒤쳐진 상황 하에서 가격 면에서도 절대 열위에 처할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자금 조달의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증권 시장이 매우 취약하여 값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권 시장의 육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그 사이에 해외 업체들이 국내 금융 산업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해

외 자금 조달의 여력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인 것이다.

또한 채권 시장의 육성은 정부 발행의 국공채가 주도하는 방향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장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간접 통화 관리 방식의 정착은 잘 발달된 채권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국내 증권 시장에서 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시장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국내 금융 기관과 해외 업체간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 것이다.

한편, 해외 금융 기관의 국내 진출이 상당히 진전되면 금융 당국은 국내외 금융 기관에 대해 무차별적 원칙에 의해 금융 행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일단 해외 금융 기관이 국내 시장에서 일정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후에는 자국의 금융 기관을 차별적 우대나 별도의 정책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내 자본 시장을 완전 개방한

현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통제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방화·자유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불어 철저한 금융 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앞서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21세기 금융시스템의 비전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금융 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